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발전노조 창립 제17주년을 맞으며 -



2002년 정부는 전력산업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인 발전소의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발전노조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서 국민 86%의 지지를 받으며 싸웠던 38일간의 파업과 남동발전 매각을 위한 투자자 실사저지 투쟁 등으로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348명이 해고되고, 1,000여명이 징계에 내몰리고, 무려 425억 원이라는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탄압도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노조로서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에 온몸으로 부딪혀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노조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세월동안 끊임없이 탄압을 받게 된 배경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오랜 시간동안의 차별과 불이익 앞에 힘겨워 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전노조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민주적 발전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발전노조는 옳은 명분과 실리를 지켜왔으며, 인권유린도 마다하지 않았던 노무관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발전노조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적폐정권은 무너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발전노동자 탄압을 기회로 삼았던 적폐세력 부역자들이 아직도 발전현장에 건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파괴에 앞장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그 날까지 함께 합시다. 어려운 세월을 함께 해주신 발전노조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발전노조 활동보고 및 일정**

-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선전전(청와대 앞, 지부별 선전전)
- 7/12 중부노조 소송비용 청구소송 선고 - 발전노조 승소 / 중부발전 신입사원 교육 / 한산발전지부 중앙위원회(노조 회의실) /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집행위원회(삼척)
- 7/17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14시) ▪ 7/20 중부 학자금상환 청구소송 변론(15시)
- 7/21-22 남부발전본부 수련회(영월)
- 7/24 제17주년 발전노조 창립기념일 / 공공성 강화 촛불문화제(18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없이 함께 일하자.

예전 한국전력공사 시절에는 상탄부터 회처리 까지 직접공정 부문과 정비영역까지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정치-경제의 결탁과 시장화-효율화 등을 앞세워 외곽업무들이 하나둘 외주화되어, 현재 발전현장에는 약 8,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발전노조 영월화력지부 선전전 모습]

작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전회사들은 노동자대표와 상의도 없이 전환대상을 정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했다. 협의기구에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가 노동자대표로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거나 직접 고용된 운전기사가 임금삭감으로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발전회사들은 이들에게 ‘저임금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

설비운전도 민간의 고도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라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우기다가 최근에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그

런데 또 정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발전5개사로 나뉘어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합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자를 분리·약화시키는 꿈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어떤 노동자는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을 연장근무로, 어떤 노동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5년간 발전현장 산업재해 346건 중 9건을 빼고 모두 비정규직이 당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오는 8월 초 국회의원들이 대거 발전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안타깝지만 한국노총과 발전정규직기업노조들도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의 압초다. 이들과 함께하는 희망노조는 회사가 ‘희망’하는 자회사 물이를 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서부노조는 협의기구가 법에 따른 기구가 아님에도 대표노조만 참여할 수 있다면서 발전노조 서부분부를 배제하는 갑질까지 한다. 그렇지만 발전노조는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민주노조’를 지향하면서 8000여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 직접고용으로 달려 나갈 것이다. 발전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시간 단축 대응의 건’ 결과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7/17)

- ▶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유노동무임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건비가 수반된 인력충원을 요구한다.
- ▶ 교대근무자 휴가 시 해당보직의 공식·겸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이의 검토를 진행한다.
- ▶ 3개월간 발전현장의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한다.